

버스대란 위기 속 광주 전남 노조 협상 엇갈려

광주 노사 협상 제자리, 전남은 영암서 최초 타결 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서 파업 여부 윤곽

광주와 전남의 한국노총 소속 버스노조가 오는 15일 파업참여를 잇달아 가결하면서 1천450여대의 시내·군 버스 운행이 중단될 위기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남지방노동위원회 회의의 마지막 조정회의에서의 타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광주는 협상 타결에 먹구름이 여전하고, 전남은 영암군에서 최초 협상 타결 결과가 나오는 등 그룹 사이에 햇빛이 비치는 형국이다.

13일 광주시와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

맹 광주지역 버스노조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교섭을 이어간 노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이 변함없는 입장만 고수하며, 조정연기를 요청해 회의를 박차고 나왔다"며 "내일 오후 예정된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타결을 보지 못하면 15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광주지역에서는 한국노총 버스 노조원은 1천444명으로, 이들이 파업에 참여하면 9개 버스회사의 630여대의 버스 운행

이 중단된다고 노조 측은 보고 있다.

반면 시군별 개별 자율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전남도 18개 시군버스 노사는 일부 진전된 협의 결과를 도출하는 등 극적 타결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라는 전남도의 전언이다.

특히 이날 오후 영암군 농어촌버스가 사측과 근무 일수 1일 단축, 임금동결, 정년 연장(62세) 등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영암군의 타결 소식은 다른 시군의 협상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영암군을 포함한 순천·여수·광양·목포 4개 지역 시내버스와 군 단위 버스 등 총 18개 버스회사의 노사는 52시간 근무제

에 따른 근무 일수 단축과 임금 5~7.2%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근무시간 단축 부분에서는 진전된 협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시군버스회사들은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 운임 요율 조정안을 지난해 12월 이미 전남도에 제출해 근무 일수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 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전남도 18개 회사가 모두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 15일에는 총 820여대의 시군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노위 조정회의는 전남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광주는 오후 2시부터 진행돼

협상 타결과 파업참여 여부는 오후 저녁 늦게나 윤곽이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세버스·통학버스 투입, 공공기관 시차 출퇴근제 등 파업에 대비한 특별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다.

광주 버스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지 않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내일 마지막 조정회의까지 타결을 보지 못하면 15일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 버스노조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공감대를 마련하면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노조도 합의에 대한 의지를 갖고 교섭과 조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광주시, 5·18 기념식 편의 제공 수송버스 18대·셔틀버스 운행

광주시는 광주지방보훈청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자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수송버스와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수송버스는 14개 지역에서 국립5·18민주묘지까지 총 18대가 운영된다.

출발장소는 △광주시청(8:00) △동구청(8:00), △서구청(8:00) △남구청(8:00) △북구청(8:00) △광산구청(8:00) △광산구 수완동 행정복지센터(8:00) △광주YMCA(8:00, 8:30) △임동119안전센터 앞(8:00, 8:30) △5·18기념문화센터(8:00) △광주보훈병원 건너편(8:30)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앞(8:00, 8:30) △광주송정역 시외버스정류장(8:00, 8:30) △각화동 농수산물 시장 앞(7:30, 8:30) 등이다.

이 버스는 기념식이 끝난 후 오전 11시30분 국립5·18민주묘지 주차장에서 당초 출발장소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함께 셔틀버스도 기념식 당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광주동초등학교-국립5·18민주묘지 △수곡3거리-국립5·18민주묘지 등 2개 노선을 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수송버스와 셔틀버스는 모두 무료로 탑승 가능하다. /정승현 기자 jsh9668@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설립

국비 213억원 투입... 굴지 제약기업 입주 기대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화순에 들어선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첨단 의약산업 허브 구상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전남도는 국가 백신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식약처의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화순 유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주관 사업자로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를 선정했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4년간 213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된다.

국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백신 연구개발·건설부터 임상, 승인까지 전주기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신속한 백신 제품화와 해외 수출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안정적 백신 공급과 백신 자급률 제고가 가능해지고, 국내 굴지의 제약기업의 화순백신산업특구 동반 입주도 크게 늘 전망이다.

특히 전남도는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식약처 '전남 분원'

으로 격상시켜 화순백신산업특구에 백신 연구·임상에 이어 국가 인·허가까지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유치는 전남도가 그동안 화순백신산업특구에 △전남생물의약연구센터(R&D) △화순전남대병원(임상)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정입상) △국가미생물실증지원센터(시제품 생산) △주녹십자(대량 생산) 등 국내 유일의 백신 원스톱 인프라를 갖춰온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다.

안상현 전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해마다 10% 이상 성장하는 백신산업은 단순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시제품, 원료, 의료장비 등 제조업 분야로의 파급·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며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유치를 계기로 전남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국가 바이오산업의 밸류체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강연하는 문정인 특보 13일 오후 광주 동구 옛전남도청 2층 회의실에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 39주년에 정치권 광주로 집결

여야 지도부, 5·18묘지 참배, 전야제·기념식 참석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정치권이 광주에 집결한다.

민주평화당은 39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참배에는 정동영 당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어 5·18민주광장에서 최고회의를 열고 5·18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결

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16일 광주를 찾는다.

시의원 23명은 이날 오전 5·18묘지를 참배하고 이어 오후 옛 전남도청에서 복원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5·18단체 관계자를 만날 계획이다.

이들은 5·18 망언자 퇴출과 5·18 진상 규명 및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 당직자들도 17일 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5·18 전야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날 5·18묘지에서 열리는 39주년 기념식에도 참석한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 지도부와 의원들도 전야제와 기념식에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는 18일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총선을 1년가량 앞둔 데다 왜곡 논란 등으로 5·18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광주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엽 기자 esaca@

'국유재산 산업용지 분할' 광주 평동산단 규제 해소

국유재산인 광주 평동산단 내 용지 분할 규제가 지자체의 노력으로 결실을 거뒀다.

13일 광주 광산구에 따르면 '평동산단 산업용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권해석이 최근 나왔다.


평동산단 19개 입주업체는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공장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 중인 용지를 분할해 금융권 대출 신청과 공장증축 등 투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19개 업체는 2013년 5월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최대 20년 동안 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용지를 샀다.

대금 완납 전 산업용지인 땅 소유권이 기획재정부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 왔다.

이달 초 유권해석을 받아낸 광산구는 산업용지 분할 신청도 대행해주기로 했다.

/주형탁 기자 htjoo@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스 공급

귀뚜라미에너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수준의 안전과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무결점 안전관리로 고객감동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www.kituramienergy.co.kr

문의:1670-4700

